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 분석: 능력주의의 작용을 중심으로*

김 고 은** · 김 경 근***

요약

본 연구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은 능력주의의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가 수집한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가 연령, 평등주의 태도, 사회 신뢰 정도,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및 빈곤의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정도와 밀접한 연관성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는 거주지,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 평등주의 태도, 사회 신뢰 정도,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및 빈곤의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정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능력주의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개연성을 유의미하게 높였다. 연령,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 주관적 계층의식은 이 같은 능력주의의 작용에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적 기대와 궤를 달리하는 연구결과를 다수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사회적 약자 우대, 능력주의, 채용, 로지스틱 회귀분석

* 유익한 논평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k_goeun@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kimkk@korea.ac.kr)

1. 서론

한국인은 '불평등'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심성의 기저에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권일, 2021). 능력주의는 능력과 실력에 따라 각자가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이진우, 2021; Young, 1958). 각자의 능력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안에서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사회적 보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기에 경쟁의 결과로서 발생한 불평등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능력주의의 요체이다(이진우, 2021). 신뢰라는 사회자본이 빈약한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거 귀족사회에서 중시되었던 출신 배경이 아닌 능력과 자질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을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Reeves, 2018). 하지만 오늘날 능력주의는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김태심, 2020; 박권일, 2021; Reeves, 2018). 능력주의가 새로운 '엘리트 귀족'의 탄생을 가져오고, 능력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권력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엘리트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진우, 2021; 정태석, 2021).

개인의 성공이 능력 때문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도 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윤초희, 2016; 최성수, 2021). 그런데도 능력주의 신봉자들은 성공을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쟁취한 것이라 믿으며 그 쟁취 과정 역시 공정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McNamee & Miller, 2013; Shariff, Wiwad, & Akinin, 2016). 이 같은 능력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려진 승자의 능력과 우월감은 인정받아 마땅하고, 패자의 무능함과 굴욕감은 응당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겨지면서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용인된다(장은주, 2021; Sandel, 2020).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깊게 내면화하면 사회적 약자는 계속 약자로서 삶을 영위하는 이유가 있으리라 상정하게 된다(박권일, 2021).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김으로써(Reeves, 2018), 결과적으로 재분배가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끔 한다(Alesina & La Ferrara, 2005). 이 때문에 강고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운명공동체라는 연대감을 느끼기 어렵고 공동선 의식의 형성도 녹록지 않게 된다(Sandel, 2020).

한국 사회에서는 공무원 선발시험, 민간기업의 공채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high-stakes exam) 합격이 응시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시험이나 채용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은 갈등과 논란을 유발한다(박권일, 2021).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게 되면 낙인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고 차별에 노출되기도 쉽다. 일부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고른기회전형을 활용한 학생들에 대해 ‘기균층(기회균등선발전형 출신)’이나 ‘지균층(지역균형선발전형 출신)’ 등의 멸칭(蔑稱)을 사용하는 현상은 이 같은 사회 풍조를 여실히 보여준다(김경근, 2021).

불공정을 참지 못하는 한국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능력주의는 양보하기 어려운 가치이자 삶의 문법으로 볼 수 있다(박권일, 2021). 하지만 능력 자체가 가정배경이나 운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능력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의 심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 공정성 시비가 거의 없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 자체는 높으나 최종 합격률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낮았다. 공무원 시험은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제도로 여겨지지만, 그 내부의 기회구조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셈이다(김도영, 최울, 2019).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사회 정의나 공동선 등 대의명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돈, 권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듯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우대 조치 또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김범수, 2022). 이미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고 수저계급론까지 대두한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양극화나 계층 간 격차 심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능력주의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외에서 능력주의에 관한 담론은 많이 제시되었다(권성민, 정명선, 2012; 김범수, 2022; 박권일, 2021; 성열관, 2015; 장은주, 2016, 2021; Frank, 2017; McNamee & Miller, 2013; Sandel, 2020; Young, 1958). 하지만 능력주의 신념과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능력주의 신념이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 사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태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사회

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및 예측요인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김경근, 심재휘, 2016). 이러한 사회적 약자는 대개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의미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1960년대 미국에서 과거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과 불평등 상황의 시정을 위해 처음 실시되었고, 1970년대에는 결과에서의 평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는데, 1980년대에는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인종 개념이 모호해지고 능력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적극적 조치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 실현을 표방하게 되었다(이종일, 2019; Tucker, 2000).

국내에서 적극적 조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차별수정정책,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소수자우대정책 등과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경근, 심재휘, 김솔, 2019; 김정인, 2013; 이재희, 2016).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까닭에 사회적 약자 우대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윤인진, 김상학, 2003). 최근 사회적 약자는 단순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자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 우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넘어 결과의 평등을 위한 실천적 정책의 제도화로 나아가고 있다(이종일, 2019).

그간 국내외에서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된 내용은 성차별 해소방안이다. 여성이 응당한 지위나 보상을 누리는 데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라 일컬어지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배경과 타개 방안이 논의되었다(Acker, 2009).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전문가 집단이나 기업 등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된 배경을 살펴보고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 조치가 검토됐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Kravitz & Platania, 1993). 이러한 맥락의 적극적 조치는 기존 불평등 및 과거에 발생한 차별의 유산을 제거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Lee, 1999).

‘유리 천장’ 관련 초기 논의들은 젠더 불평등을 낳는 개인적, 심리적 차별 행위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구조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에 광범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Acker, 2006; Henriques, 1984). 남성과 여성 간에는 전반적 능력이나 역량에서 차이가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과 여성 간에 성과에 대한 차별적 기대와 이중 잣대를 조장한다는 관점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여성에 대한 낮은 기대와 이중 잣대 때문에 여성의 경우 남성과 똑같이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그 성과를 능력과 연계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Foschi, 1996; Ridgeway, 2001).

이 지점에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성차별의 도구로 동원된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남성 중심적 규범이나 논리에 바탕을 둔 공정성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경쟁을 정당화하며 젠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는 남성을 이상적이고 표준적인 노동자로 상정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를 경제적으로 호도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엄혜진, 2021; 이재경, 2018; Ridgeway, 2001).

적극적 조치 관련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원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정책, 채용이나 훈련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를 유인하고 참여시키고자 노력하는 정책, 다른 지원자와 비슷한 역량을 갖췄다면 소수집단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 자격이나 역량을 따지지 않고 지원자가 어떠한 집단 소속인지 따져서 선발하는 정책이 그것이다(Abersson, 2007). 앞쪽으로 갈수록 선발 기준으로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반면, 뒤쪽으로 갈수록 소속 집단을 선발을 위한 핵심 준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ilva, Santos, & Rosa, 2021).

적극적 조치나 사회적 약자 우대를 바라보는 태도는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호적임을 밝힌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Harrison et al., 2006; Kravitz & Platania, 1993).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 우대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형평이나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Arts & Gelissen, 2001).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 우대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존재한다(e.g. 조돈문, 2001; Murrell et al., 1994). 이와 관련하여 조돈문(2001)은 가계를 꾸리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 우대 제도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

1)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관련 요인들 가운데 일부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영향요인을 고찰한 연구가 드문 까닭에 유사한 성격과 지향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수행한 결과이다.

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성별과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이해관계의 틀 안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인진, 김상학, 2003).

연령이나 세대가 적극적 조치 또는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이러한 가운데 이지은, 이재완(2015)은 연령과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대한 선호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Kluegel & Smith(1983)는 연령이 다양한 유형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 사회에서 연령이나 세대의 영향을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큰데도 복지정책에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순, 노정호, 2017).

교육수준도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까닭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데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Tomlinson & Walker, 2012). 반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약자가 받는 편익을 비교적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배려에 우호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Golden, Hinkle, & Crosby, 2001).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양자 간 관계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이중섭, 2009; 이지은, 이재완, 2015).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사회적 약자 우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됐다(Romer, 1975; van Oordchot, 2002).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활동 집단보다 비경제활동 집단이 사회적 약자 우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큰데, 이는 자기이해(self-interest) 차원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사회적 약자 우대의 수혜자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Alesina & La Ferrara, 2005). 그런데 국내에서는 소득수준과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간에 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이지은, 이재완, 2015).

거주지도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연관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 거주지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엄격한 노동윤리를 적용하여 복지수급자에게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까닭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려는 성향도 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이중섭, 2009).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도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체로 진보적 성향을 지닐수록 사회적 약자 우대에 긍정적이고 보수적 성향일수록 적극적 조치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많다(이지은, 이재완, 2015; Harrison et al., 2006; Massey, 2004).

다음으로 주요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려는 태도는 '자기이해(self-interest)'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자기이해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할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따져 해당 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인식체계로 볼 수 있다(Crosby, Iyer, & Sincharoen, 2006; Harrison et al., 2006). 자기이해는 장애인, 빈곤층, 실업자, 여성 등 적극적 지지 정책이나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 해당 정책에 우호적인 경향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Alesina & La Ferrara, 2005; Harrison et al., 2006; Kravitz & Platania, 1993).

자기이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요인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을 들 수 있다. 계층은 측정 요소에 따라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계층은 학력이나 소득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의 소유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주관적 계층은 사회적 위계 내에서 스스로 내린 계층의 위치에 관한 판단을 기준으로 측정한다(송한나, 이명진, 최셋별, 2013).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우대나 재분배 같은 정책에 대한 선호에는 주관적 계층이 객관적 계층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Cruces, Perez-Truglia, & Tetaz, 2013). 즉 주관적 계층이 낮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약자 우대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이지은, 이재완, 2015; Taylor-Gooby, 1982). 다만 국내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류만희, 최영, 2009).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입장인데,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평등주의 신념이 강할수록 빈곤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여겨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려는 정책을 선호할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Lepianka, Gelissen, & van Oorschot, 2010). 사회를 향한 신뢰 또한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사회를 신뢰할수록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 신뢰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이지은, 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역시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은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지지하고 자신에게 지워질 물질적 부담도 감수하고자 하는 자세 또는 태도'로 정의된다(심재휘, 방수민, 김경근, 2016). 다수의 연구가 빈곤의 원인을 제도나 사회의 탓으로 돌릴수록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고했다(Kluegel & Smith, 1983; Tagler & Cozzarelli, 2013).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적극적 조치에는 인종 관련 적극적 조치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 & Huddy, 2005). 국

내에서 빈곤 귀인(貧困 歸因)이 재분배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오현주, 이상신, 2015)에서도 빈곤의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재분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2) 능력주의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Young(1958)이 펴낸 『능력주의의 발흥(The rise of the meritocracy)』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Young(1958)은 ‘능력(merit)’은 ‘지능(intelligence)+노력(effort)’의 결합체이고, 능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배분하는 체제를 능력주의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능력주의 사회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이다.

능력주의는 학교교육의 보급과 함께 등장했다. 과거 신분사회에서는 ‘사람은 혈통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라는 신념에 따라 인간을 고급혈통과 하급혈통으로 분류했고 상호 간 혼인도 금기시했다. 그러나 근대사회 도래와 함께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존재라는 신념이 확산했고 인간 평등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평등사회 실현을 향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학교교육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졌다(Dench, 2006). 이러한 교육제도가 신분제도를 대체함에 따라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능력주의가 대두했던 것이다(김신일, 2015).

산업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체제와 맞물려 공정한 사회제도로 환영받았다. 특히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로 그럴듯하게 채색되었고 능력주의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 연구자들은 완벽한 능력주의의 안착에 박차를 가했다(박남기, 2018). 그러나 이는 처음 능력주의를 명명한 Young(1958)이 꼬집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면을 대부분 배제하고, 사회적 선발과 보상의 기초인 성과로서 신분을 대체하는 사상만을 수용한 형태의 능력주의였다(권성민, 정명선, 2012).

Young(1958)은 능력에 의해 모든 것이 평가되는 사회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거나 정신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상황에서 하층민을 대변할 지도자가 부재하고 능력을 통한 부 획득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능력을 판별하는 장(場)인 교육에서 경쟁이 극단적 양상으로 치달게 되리라 예측하였다(Young, 1958). 그의 예측대로 능력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한국 사회에는 현재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과 선발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고 엄격하게 서열화된 질서가 오랫동안 존재했다(김경근, 2021; 성열관, 2015). 과거제도도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추구한 선발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 구한말 이래 급격하게 전개된 전통적 신분질서의 와해는 그것을 대체할 사회적 지위 분배 기제로서 능력, 특히 학력의 중요성을 키웠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강고한 믿음은 자녀가 더 높은 학력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만들었고, 이는 뜨거운 교육열로 발산되었다(김경근, 2016). 이처럼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발생한 교육열과 학교팽창은 학력주의를 더욱 부추겼고(Kobayashi, 1980), 성적 중심의 일원적 능력관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입시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문제를 낳았다(김경근, 2016).

3) 능력주의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

서구사회에서 능력주의는 분배적 정의의 원리로서 동원되어 개인 수준의 산출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Davey et al., 1999).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는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현상을 유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강고한 능력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 약자 우대나 적극적 조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높은 이유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on Hing et al., 2011).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데 핵심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박권일, 2021; 장은주, 2021; Frank, 2017; Sandel, 2020). 능력주의가 개인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비능력적 요소는 과소평가함으로써 불평등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켜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백병부, 심재휘, 2021).

능력주의 신념이 강고하면 누군가의 성취를 순전히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로 보고 불평등과 빈곤을 정당한 자원 배분의 결과로 보기 쉽다(Jost & Hunyady, 2003; Jost & Thompson, 2000; Trump, 2019). 이 때문에 능력주의 신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불운에 둔감하고 사회적 약자 우대에도 인색할 공산이 크데, 능력주의 신봉자들 관점에서는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보상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거나 역차별이기 때문이다(Frank, 2017).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운이나 성장배경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García-Sánchez et al., 2020).

그런데 능력주의가 자기이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작동할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강고한 능력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가족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있거나 자신이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능력주의 신념이 좀 더 유연해질 공산이 있는 것이다. 자기이해야말로 사람들의 선택과 행위를 추동하고 조절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동기체계이기 때문이다(Harrison et al., 2006; Kravitz & Platania, 1993). 자기이해에 따라 능력주의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구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3.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연관성을 갖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의 작용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2021년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가 수집한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한 일반시민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집되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에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 사회적 약자 배려 태도나 능력주의 태도 등을 묻는 문항들과 이러한 요인들과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표집은 2020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총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위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2)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이다. 변수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민간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것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각각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아래 [표 1]의 기술통계에 제시됐듯이, 공무원 채용의 경우 전체 표본의 56.1%가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에 찬성했고,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데 동의한 비율은 59.2%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N=1,013)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 우대 동의 여부	0.561	0.497	0	1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 우대 동의 여부	0.592	0.492	0	1
성별(1=여성)	0.486	0.500	0	1
연령				
전체(만 19~59세)	39.892	11.593	19	59
20대(만 19~29세) (준거집단)	0.237	0.425	0	1
30대(만 30~39세)	0.224	0.417	0	1
40대(만 40~49세)	0.261	0.439	0	1
50대(만 50~59세)	0.278	0.448	0	1
교육수준	13.892	2.213	6	18
소득수준	5.161	2.133	1	9
거주지				
서울시 (준거집단)	0.193	0.395	0	1
광역시	0.252	0.434	0	1
중소도시	0.464	0.499	0	1
읍면지역	0.091	0.287	0	1
정치성향				
보수	0.188	0.391	0	1
중도	0.541	0.499	0	1
진보 (준거집단)	0.271	0.445	0	1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0.270	0.444	0	1
주관적 계층의식	4.831	1.608	1	9
평등주의	3.185	0.521	1	4
사회 신뢰	1.793	0.620	1	4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2.986	0.551	1	4
빈곤 귀인	2.609	0.780	1	4
능력주의	2.755	0.566	1	4

다음으로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거주지, 정치성향,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주관적 계층의식, 평등주의, 사회 신뢰,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빈곤 귀인, 능력주의 신념 등의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여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연령은 응답자가 밝힌 만 나이를 사용하여 연속변수 및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소득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150만원 미만, ③150-200만원 미만, ④200-300만원 미만, ⑤300-400만원 미만, ⑥400-500만원 미만, ⑦500-600만원 미만, ⑧600-700만원 미만, ⑨700만원 이상의 9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1~9의 값을 가진 연속변수 형태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졸업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것에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4년제대졸(=16), 대학원졸(=18)의 값을 부여했다. 중퇴한 경우는 바로 전 단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거주지는 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류하여 서울시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변수는 자기이해의 대리변수(proxy) 성격이 있는데, '귀하의 가정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정치성향의 경우 '귀하는 자신이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①매우 보수적, ②다소 보수적, ③중도, ④다소 진보적, ⑤매우 진보적'과 같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보수(①, ②), 중도, 진보(④, ⑤)로 범주화한 다음에 진보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사회심리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평등주의, 사회 신뢰,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은 각 변수별로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조사된 응답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로 설문 문항들이 변수를 구성하는 신뢰도를 확인하였는데, Cronbach's α 계수는 0.5를 넘으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0.7 이상은 신뢰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Hinton, McMurray, & Brownlow, 2014; Kline, 2013). 평등주의 변수는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3개 항목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622$). 사회 신뢰는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우리 사회제도에 대해 믿음이 간다'라는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788$).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은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배려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3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697$). 주관적 계층의식은 '귀하는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점 척도(최하층은 1점, 최상층은 10점)로 응답한 값을 그대로 분석모형에 투

입하였다. 빈곤 귀인은 '가난은 개인이 게으른 탓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4점 척도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된 응답값을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빈곤을 사회제도의 탓으로 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능력주의는 '사람들이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장학금을 줄 때는 가정형편보다 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학시험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성적이어야 한다' 라는 3개의 진술에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0.548$).

3) 연구모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연관성을 갖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려 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변화가 연속적인 직선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우대 찬성 여부처럼 0과 1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는 형태를 다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를 비선형이라고 가정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변수 형태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Cox, 1958).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본 수식은 아래와 같다.

$$\log\left(\frac{P}{1-P}\right)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는 찬성(=1)과 반대(=0)의 이항변수 형태를 띤다. 여기서 종속변수의 기댓값은 개인이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 우대에 찬성할 확률 P 와 같다. 따라서 분석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종속변수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 없다. 반면 우변에 있는 독립변수들의 선형함수는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P 를 변형하여 우변의 선형함수와 연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P 를 $\log\left(\frac{P}{1-P}\right)$ 로 변환하는 함수를 취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는 모형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 한다(Cox, 1958).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우도(likelihood), 즉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하는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likelihood method)을 사용한다.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독립변수의 승산(odds-ratio)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변수가 갖는 영향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추정모형에는 다수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일정 정도 서로 연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만일 3개 이상의 독립변수 간에 강력한 선형관계가 존재하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때문에 분석결과가 왜곡되어 종속변수에 대한 특정 독립변수의 독자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진다. 변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회귀계수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잡을 수 없게 변화하는 것이 다중공선성이 유발하는 대표적 증상이다(Chatterjee & Price, 1977). 이에 본 연구에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지수를 통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정모형에서 각 변수의 VIF 지수는 1.02~1.85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²⁾ 본 연구에서 통계 분석은 STATA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를 바라보는 태도와 연관성을 갖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의 작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1)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

[표 2]에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능력주의 제외)을 두루 투입한 모형1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우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 우대에 더 우호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Harrison et al., 2006; Kravitz & Platania, 1993)나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 우대에 소극적이라는 연구결과(김희자, 1999;

2) 일반적으로 VIF 값이 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가 있고, 10 이상이면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이근희, 2004).

조돈문, 2001) 모두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성은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반적 기대나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강고한 집착 때문에 공개경쟁시험을 중심으로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가운데(박권일, 2021), 여성이 공개경쟁시험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강력한 여풍이 불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 처음으로 여성이 전체 국가공무원의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역대 최고인 57.4%를 기록했다. 급기야 2022년 서울시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은 합격자의 80.0%를 점유하는 초강세를 보였고, 이 때문에 양성평등합격제도의 혜택도 모두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한다(매일경제, 2022.05.27.).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들로서는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를 지지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 우대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라는 낙인효과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처럼 각종 사회적 선발에서 능력을 시험 성적으로 측정하는 제도나 관행이 유지되는 한, 여성은 자기이해(self-interest) 측면에서도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에 기대기보다는 능력주의 기반 채용제도를 더 선호할 공산이 크다. 여성이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상수	-4.302*** (0.852)		-4.759*** (0.833)		-3.090** (0.901)		-4.917*** (0.831)	
성별(1=여성)	-0.248 (0.136)	0.781	-0.239 (0.136)	0.787	-0.259 (0.138)	0.772	-0.266 (0.138)	0.766
연령 전체	-0.020** (0.006)	0.980					-0.023*** (0.006)	0.977
30대			-0.279 (0.206)	0.757	-0.307 (0.208)	0.735		
40대			-0.589** (0.197)	0.555	-0.685** (0.200)	0.504		
50대			-0.641** (0.197)	0.527	-0.737*** (0.200)	0.479		
교육수준	0.024 (0.033)	1.024	0.025 (0.033)	1.025	0.034 (0.034)	1.035	0.031 (0.033)	1.032
소득수준	0.017 (0.038)	1.017	0.018 (0.038)	1.019	0.018 (0.039)	1.018	0.017 (0.039)	1.017

거주지(ref.=서울시)								
광역시	0.370 (0.205)	1.447	0.379 (0.206)	1.460	0.345 (0.208)	1.413	0.330 (0.208)	1.391
중소도시	0.184 (0.183)	1.202	0.186 (0.183)	1.204	0.150 (0.185)	1.162	0.139 (0.185)	1.150
읍면지역	0.511 (0.278)	1.667	0.539 (0.279)	1.714	0.490 (0.281)	1.632	0.457 (0.280)	1.580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0.313 (0.166)	1.367	0.314 (0.166)	1.369	0.268 (0.168)	1.307	0.268 (0.168)	1.307
정치성향(ref.=진보)								
보수	-0.240 (0.209)	0.787	-0.240 (0.209)	0.787	-0.204 (0.212)	0.815	-0.213 (0.212)	0.808
중도	-0.292 (0.167)	0.747	-0.289 (0.167)	0.749	-0.274 (0.169)	0.760	-0.284 (0.169)	0.753
주관적 계층의식	0.040 (0.052)	1.041	0.040 (0.053)	1.041	0.037 (0.053)	1.038	0.040 (0.053)	1.041
평등주의	0.377* (0.151)	1.458	0.377* (0.152)	1.458	0.367* (0.153)	1.443	0.360* (0.154)	1.434
사회 신뢰	0.294* (0.113)	1.341	0.297** (0.114)	1.346	0.281* (0.114)	1.325	0.278* (0.114)	1.320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0.694*** (0.140)	2.001	0.697*** (0.140)	2.007	0.735*** (0.142)	2.086	0.729*** (0.144)	2.073
빈곤 귀인	0.376*** (0.097)	1.456	0.374*** (0.097)	1.454	0.340** (0.098)	1.405	0.347*** (0.098)	1.414
능력주의					-0.595*** (0.128)	0.552	-0.599*** (0.152)	0.550
능력주의 × 연령							-0.011 (0.011)	0.989
능력주의 ×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0.022 (0.308)	0.979
능력주의 × 주관적 계층의식							-0.035 (0.084)	0.966
N	1,013		1,013		1,013		1,013	
-2LL	1262.812		1260.310		1238.177		1240.097	
Nagelkerke R^2	0.157		0.160		0.186		0.184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데 동의할 승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은, 이재완(2015)이 연령과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대한 선호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반면 김영순, 노정호(2017)는 한국 사회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약자로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비교적 큰데도 복지정책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 연령과 복지정책 지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고령층이 복지정책에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해석이 있었다(이상록, 김형관, 2013).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모두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동되어 달라지지 않는음을 시사한다. 거주지도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거의 무관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 지역 요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찬성할 개연성을 다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이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정 내에 사회적 약자를 둔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와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치성향도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진보 성향을 지닐수록 사회적 약자 우대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이지은, 이재완, 2015; Massey, 2004)와는 상반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Harrison et al., 2006). 모형1에 제시된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사회심리학적 요인들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평등주의 태도가 강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향을 지닐수록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데 동의할 승산이 높았다. 또한 사회를 신뢰하고 빈곤을 사회의 탓으로 돌릴수록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동의할 개연성이 컸다. 이는 평등주의 신념이 강하거나 사회를 신뢰하고 빈곤이 사회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불평등이나 여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방편으로 사회적 선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1에서 연속변수로 투입된 연령과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에 부적(負的)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모형2에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느 세대부터 갈리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20대(만 19~29세)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데 20대보다 부정적 태도를 지닌 집단은 40대와 50대로 나타났다. 40대보다는 50대가 조금 더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공정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젊은 세대보다 기성세대가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훨씬 더 경직되고 폐쇄적인 태도를 지닌 셈이다.

모형3에는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능력주의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형 2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능력주의 신념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유의미하게 부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 연관성의 정도는 매우 강력했는데, 이를 통해 신뢰라는 사회자본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와 결합한 능력주의가 사회적 약자 우대와 같은 적극적 조치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강고한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상당한 난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자기이해나 다른 조건에 따라 능력주의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능력주의와 연령, 능력주의와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능력주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연령,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능력주의 간 관계에 조절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능력주의 간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고,³⁾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 ‘마음의 습관’ 또는 ‘삶의 문법’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형1을 살펴보면, 공무원 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별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무원 채용의 경우와 달리 연령도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역시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거주지는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데 동의할 개연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주민들이 민간기업 취업에서 이런저런 배려를 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도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안에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면 사회적 약자를 우대

3) 모형4에서 연령을 연속변수가 아니라 더미변수로 투입했을 때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표 2]의 모형 4에는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더미변수 대신 연속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제시했다.

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자기이해적 태도가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정성이 무엇보다 증시되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 비해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한편 정치성향은 공무원 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우대를 바라보는 태도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표 3]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상수	-4.661*** (0.849)		-4.741*** (0.827)		-2.451** (0.900)		-4.665*** (0.835)	
성별(1=여성)	-0.009 (0.136)	0.991	-0.005 (0.137)	0.995	-0.019 (0.140)	0.981	-0.020 (0.140)	0.980
연령 전체	-0.005 (0.006)	0.995					-0.009 (0.006)	0.991
30대			-0.154 (0.206)	0.858	-0.187 (0.210)	0.829		
40대			-0.135 (0.196)	0.874	-0.263 (0.201)	0.769		
50대			-0.243 (0.195)	0.784	-0.366 (0.201)	0.693		
교육수준	0.030 (0.038)	1.031	0.032 (0.034)	1.032	0.048 (0.034)	1.049	0.045 (0.034)	1.046
소득수준	-0.061 (0.033)	0.941	-0.060 (0.038)	0.942	-0.066 (0.040)	0.936	-0.068 (0.040)	0.934
가주지(ref.=서울시)								
광역시	0.687** (0.206)	1.988	0.690** (0.206)	1.993	0.664** (0.211)	1.942	0.659** (0.211)	1.932
중소도시	0.436* (0.181)	1.547	0.438* (0.182)	1.550	0.411* (0.186)	1.508	0.412* (0.186)	1.510
읍면지역	0.600* (0.275)	1.822	0.600* (0.275)	1.822	0.536 (0.280)	1.709	0.533 (0.280)	1.704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0.513** (0.169)	1.671	0.517** (0.169)	1.677	0.464** (0.173)	1.590	0.469** (0.173)	1.598
정치성향(ref.=진보)								
보수	-0.303 (0.207)	0.739	-0.308 (0.208)	0.735	-0.262 (0.213)	0.770	-0.265 (0.213)	0.767
중도	-0.068 (0.167)	0.934	-0.079 (0.168)	0.924	-0.048 (0.171)	0.953	-0.045 (0.171)	0.956
주관적 계층의식	0.074 (0.053)	1.076	0.071 (0.053)	1.074	0.068 (0.054)	1.070	0.075 (0.054)	1.078

평등주의	0.356* (0.151)	1.427	0.356* (0.152)	1.427	0.349* (0.155)	1.418	0.323* (0.156)	1.382
사회 신뢰	0.302** (0.114)	1.352	0.301** (0.114)	1.351	0.282* (0.116)	1.326	0.283* (0.116)	1.327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0.681*** (0.140)	1.976	0.685*** (0.140)	1.983	0.755*** (0.145)	2.128	0.778*** (0.147)	2.178
빈곤 귀인	0.245* (0.096)	1.278	0.241* (0.096)	1.272	0.189 (0.099)	1.208	0.196* (0.099)	1.217
능력주의					-0.858*** (0.132)	0.424	-0.827*** (0.154)	0.437
능력주의 × 연령							-0.003 (0.011)	0.997
능력주의 ×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0.153 (0.320)	0.858
능력주의 × 주관적 계층의식							-0.119 (0.086)	0.888
N	1,013		1,013		1,013		1,013	
-2LL	1258.527		1257.680		1212.891		1212.052	
Nagelkerke R ²	0.140		0.141		0.193		0.194	

*p<.05, **p<.01, ***p<.001

주관적 계층의식 역시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태도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등주의, 사회 신뢰,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빈곤 귀인은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판명되었다. 전체적으로 연령, 거주지,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예측요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에서는 20대(만 19~29세)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대에 비해 나이가 더 많은 세대가 사회적 약자 우대에 부정적인 점은 엿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모형2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에 추가하여 능력주의를 투입한 모형3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능력주의 신념이 강할수록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데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와 같은 결과로서 능력주의 신념이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 모두에서 사회적 약자 우대에 동의할 승산을 크게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불평등을 개인 탓으로 치부하고 정당화하는 능력주의가 강고하게 유지되는 한,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 우대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녹록

지 않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자기이해나 상황 논리에 따라 능력주의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능력주의와 연령, 능력주의와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 능력주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연령, 가정 내 사회적 약자의 존재, 주관적 계층의식은 모두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능력주의 간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자기이해나 상황 논리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고하게 뿌리를 내렸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읽힌다.

5. 결론

한국인의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은 강고하다. 능력주의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자원 과 지위 배분의 기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우연, 운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상당 부분 운이나 우연에 힘입은 것임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곤 한다. 강고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난이나 실패도 대부분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누군가의 가난이나 실패는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삶의 출발선에서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배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원의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태도와 연관성을 갖는 변인들은 다소 달랐다. 공무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변인은 연령, 평등주의 태도, 사회 신뢰,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빈곤 귀인, 능력주의 신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주의 태도를 지닐수록, 사회를 신뢰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이 강할수록, 빈곤을 사회구조의 탓으로 여길수록, 능력주의 신념이 약할수록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데 동의할 개연성이 높았다. 반면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는 거주지,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평등주의 태도, 사회 신뢰,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빈곤 귀인, 능력주의 신념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사는 능력주의 신념과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능력주의 신념은 공무원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를 강력하게 억누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 신념이 강할수록 사회적 약자 우대에 동의할 개연성이 확연하게 감소했다. 이 같은 능력주의 신념과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 부적 관계는 연령, 가정 내 사회적 약자 존재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자기이해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는 확고한 삶의 기준 또는 문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약화하지 않는 한, 합리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는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의 시행도 어려워져 사회통합도 그만큼 요원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표성 있는 1차 자료를 사용하여 공무원이나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연관성을 갖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의 역할을 심도 있게 구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지은, 이재완(2015)이 유사한 성격의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지만, 서울서베이 자료를 사용했고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대한 선호에 계층상승 가능성이 발휘하는 조절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와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선형적 기대와 배치되거나 선행연구 결과와 궤를 달리하는 연구결과를 다수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형적 기대와 배치되는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이 공무원이나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에 다소간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에 우호적이라는 점은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이지은, 이재완, 2015; Harrison et al., 2006; Kravitz & Platania, 1993)가 일관되게 보고했는데, 본 연구는 그것과 궤를 달리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교육수준(이지은, 이재완, 2015; Golden, Hinkle, & Crosby, 2001), 소득수준(이지은, 이재완, 2015; van Oordchot, 2002), 정치적 이념(이지은, 이재완, 2015; Massey, 2004), 주관적 계층의식(이지은, 이재완, 2015; Taylor-Gooby, 1982) 등이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선형적 기대와 배치되거나 선행연구와 궤가 다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동의하는 정도에서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원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공무원(56.1%)보다는 민간기업 사원(59.2%)을 선발할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는 공무원 시험은 오직 노력이

나 실력만으로 합격자가 가려지는 ‘공정한’ 시험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먼저 민간기업에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준비할 때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원 채용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상당히 강건하고 일관성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인의 복지 태도가 비계급성을 띠고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의해 지배된다는 연구결과(김정숙, 성열관, 2015)와 궤를 함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제도가 안착하기를 바란다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능력주의의 전향적 변화 및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구축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능력주의와 사회적 약자 우대 태도 간에 존재하는 강한 부적 상관성은 한국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 신념이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무자비한 경쟁을 심화할 공산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백병부, 심재휘(2021)는 능력주의 신념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유리한 쪽에서 경쟁에 참여했음에도 그 과실을 공동체와 나누기보다는 온전하게 자신이 독점해도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청소년기부터 능력주의를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능력주의를 열렬하게 신봉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점진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사고 방식, 행동양식을 바꾸며 사회의 규칙과 질서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무한경쟁의 강조, 사회의 해체 조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김윤태, 2015). 따라서 능력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한국 사회가 양육강식 논리의 지배를 받는 정글과 같은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적절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능력주의는 공정성의 담보와 관련하여 효용을 갖지만, 공정성이 간단하게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정태석, 2021). 기실 공정성 담론은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 사이에서 간단없이 부유하며 종잡을 수 없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어떤 때는 능력주의라는 틀을 통해, 다른 때는 기회 불평등이라는 렌즈를 통해 공정성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최성수, 2021). 따라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능력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불평등만 심화할 뿐 정작 사회 정의의 실현은 구두선으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선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지형 및 그 결정 기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제한점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 시점에서 수집한 횡

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까닭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능력주의 태도를 정교하게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고, 제시된 분석모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은 좀 더 정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권성민, 정명선. (2012). 실력주의의 이해와 비판적 고찰: 교육, 선발 및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0, 439-468.
- 김경근. (2016). 한국 사회 교육열의 동인, 유산, 승화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교육학연구*, 54(1), 229-257.
- _____. (2021). 한국사회의 서열 증시 문화: 기원, 동인 및 교육적 유산. *교육사회학연구*, 31(4), 33-69.
- 김경근, 심재휘. (2016). 중·고등학생의 능력주의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6(2), 1-29.
- 김경근, 심재휘, 김솔. (2019).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지형 및 그 영향요인. *교육문화연구*, 25(6), 5-28.
- 김도영, 최을. (2019).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 *경제와사회*, 123, 40-74.
- 김범수. (2022).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파주: 아카넷.
- 김신일. (2015).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 김영순, 노정호. (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3), 109-142.
- 김윤태. (2015). *사회적 인간의 몰락*. 서울: 이학사
- 김정숙, 성열관.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42(1), 275-300.
- 김정인. (2013).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1), 93-123.
-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1), 129-167.
- 김희자(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8, 106-124.
- 류만희, 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참는 것에 대하여. 서울: 이데아
- 박남기. (2018). 실력의 배신: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불행한가? 파주: (주)쌤앤파커스.
- 백병부, 심재휘. (2021). 청소년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능력주의 신념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1(3), 89-119.
- 성열관. (2015). 메리트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3(2), 55-79.
- 송한나, 이명진, 최셋별. (2013).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97-119.
- 심재휘, 방수민, 김경근. (2016).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약자 배려 성향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6(1), 25-49.
- 엄혜진. (2021).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경제와사회*, 132, 47-74.
- 오현주, 이상신. (2015). 한국인의 빈곤귀인과 복지태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의정연구*, 21(2), 164-200.
- 윤인진, 김상학. (200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사회*, 58, 222-248.

- 윤초희. (2016).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육비평. 37. 272-292.
- 이근희. (2004).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수정판). 서울: 법문사.
- 이상록, 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이재경. (2018). 젠더 간의 공정성과 성평등(gender equality). 지식의 지평. 25. 24-37.
- 이재희. (2016). 헌법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회적 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안암법학. 50. 159-197.
- 이종일. (2019). 한국 소수자우대정책의 특징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6(3). 1-20.
-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73-99.
- 이지은, 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359-390.
- 이진우. (2021). 불공정사회: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서울: 휴머니스트출판그룹.
- 장은주. (2016). 메리트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시민적 주체의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 32. 47-78.
- _____. (2021). 공정의 배신: 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 서울: 피어나.
- 정태석. (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 12-46.
- 조돈문. (2001). 노동시장과 계급의식 분석: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3.
- 최성수. (2021). 공정성: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 사이의 흔들림.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이한주·오재호편). 191-237. 서울: 시공사.
- “80% 뛰어넘은 여풍...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455명중 364명 차지”. 매일경제. (2022.05.27.)
- Aberson, C. L. (2007). Diversity, merit, fairness, and discrimination beliefs as predictors of support for affirmative-action policy ac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10). 2451-2474.
- Acker, J. (2006). Inequality regimes: Gender, class, and race in organizations. Gender & Society. 20(4). 441-464.
- _____. (2009). From glass ceiling to inequality regimes. Sociologie du Travail. 51(2). 199-217.
- Alesina, A. & La Ferrara, E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897-931.
- Arts, W. & Gelissen, J. (2001). Welfare states,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s: Does the type really matter?. Acta Sociologica. 44(4). 283-299.
- Chatterjee, S. & Price, B. (1977).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ox, D. R. (1958). The regression analysis of binary sequenc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20(2). 215-232.
- Crosby, F. J., Iyer, A., & Sincharoen, S. (2006). Understanding affirmative ac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1), 585-611.
- Cruces, G, Perez-Truglia, R., & Tetaz, M. (2013).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distribu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8. 100-112.

- Davey, L. M., Bobocel, D. R., Son Hing, L. S., & Zanna, M. P. (1999). Preference for the merit principle scale: An individual difference measure of distributive justice preferences. *Social Justice Research*, *12*(3), 223-240.
- Dench, G. (2006). Introduction: Reviewing meritocracy. *The Political Quarterly*, *77*(S1), 1-14.
- Feldman, S. & Huddy, L. (2005). Racial resentment and white opposition to race-conscious programs: Principles or prejudi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1), 168-183.
- Foschi, M. (1996). Double standards in the evaluation of men and wome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3), 237-254.
- Frank, R. H. (2017). *Success and luck: Good fortune and the myth of meritocr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rcía-Sánchez, E., Osborne, D., Willis, G. B., & Rodríguez-Bailón, R. (2020).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and the interplay between 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inequa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1), 111-136.
- Golden, H., Hinkle, S., & Crosby, F. J. (2001). Reactions to affirmative action: Substance and semantic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1), 73-88.
- Harrison, D. A., Kravitz, D. A., Mayer, D. M., Leslie, L. M., & Lev-Arey, D. (2006). Understanding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employment: Summary and meta-analysis of 35 years of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5), 1013-1036.
- Henriques, J. (1984). Social psychology and the politics of racism. In J. Henriques, W. Hollway, C. Urwin, C. Venn, & V. Walkerdine (eds.), *Changing the subject: Psychology, social regulations and subjectivity*. London: Methuen.
- Hinton, P., McMurray, I., & Brownlow, C. (2014). *SPSS Explained* (2nd ed.). Routledge.
- Jost, J. T. & Hunyady, O. (2003). The psychology of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alliative function of ide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3*(1), 111-153.
-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209-232.
- Kline, P. (2013).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Routledge.
- Kluegel, J. R., & Smith, E. R. (1983). Affirmative action attitudes: Effects of self-interest, racial affect, and stratification beliefs on whites' views. *Social Forces*, *61*(3), 797-824.
- Kobayashi, T. (1980). Into the 1980s: The Japanese case. *Comparative Education*, *16*(3), 237-244.
- Kravitz, D. A. & Platania, J. (1993).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ffirmative action: Effects of target and of respondent sex. and ethnic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6), 928-938.
- Lee, R. A. (1999). The evolution of affirmative actio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8*(3), 393-409.
- Lepianka, D., Gelissen, J., & van Oorschot, W. (2010). Popular explanations of poverty in Europe: Effects of contextu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cross 28 European countries. *Acta Sociologica*, *53*(1), 53-72.
- Massey, G. (2004). Thinking about affirmative action: Arguments supporting preferential policies. *Review of Policy Research*, *21*(6), 783-797.

- McNamee, S. J., & Miller, R. K. (2013). *The meritocracy myth*(3rd ed.). PA: Rowman & Littlefield.
- Murrell, A. J., Dietz-Uhler, B. L., Dovidio, J. F., Gaertner, S. L., & Drouot, C. (1994). Aversive racism and resistance to affirmative action: Perceptions of justice are not necessarily color blind.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5*(1&2), 71-86.
- Reeves, R. V. (2018). *Dream hoarders: How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is leaving everyone else in the dust, why that is a problem, and what to do about i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Rehm, P. (2009).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7), 855-881.
- Ridgeway, C. L. (2001). Gender, status, and leadership. *Journal of Social Issues*, *57*(4), 637-655.
- Romer, T. (1975). Individual welfare, majority voting and the properties of a linear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2), 163-185.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Penguin UK.
- Silva, V., Santos, M. H., & Rosa, M. (2021). Does she deserve it? The influence of gender and meritocracy in reactions to affirmative action legislation. Available online: *Social Sciences*, *10*(386). <https://doi.org/10.3390/socsci10100386>.
- Shariff, A. F., Wiwad, D., & Akinin, L. B. (2016). Income mobility breeds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Cross-n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1*(3), 373-380.
- Son Hing, L. S., Bobocel, D. R., Zanna, M. P., Garcia, D. M., Gee, S. S. & Oraziotti, K. (2011). The merit of meritocr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3), 433-450.
- Tagler, M. J. & Cozzarelli, C. (2013). Feelings toward the poor and beliefs about the causes of poverty: The role of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in Help-Giving. *Journal of Psychology*, *147*(6), 517-539.
- Taylor-Gooby, P. (1982). Two cheers for the welfare state: Public opinion and private welfare. *Journal of Public Policy*, *2*(4), 319-346.
- Tomlinson, M., & Walker, R. (2012). *Labor market disadvantage and the experience of recurrent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 Trump, K. (2019). When and why is economic inequality seen as fair.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34*, 46-51.
- Tucker, R. B. (2000). *Affirmative action, the supreme court, and political power in the old confederac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van Oordchot, W. (2002). Individual motives for contributing to welfare benefits in the Netherlands. *Policy & Politics*, *30*(1), 31-46.
- Young, M.D. (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NJ: Transaction Publishers.

Abstract

A Study on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Focusing on the Role of Meritocracy

Go-eun Kim* · Kyung-keun Kim**

Drawing on public opinion data on ‘Korean adults’ perception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collected in 2021 by the Center for Social Cohesion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we examined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in the recruitment process for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company employees among Korean adults, focusing on the role of meritocracy. Our logistic regression results exhibited that age, egalitarian attitudes, trust in society, caring attitudes toward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attribution of poverty to societal factors were close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in the hiring process of public officials. On the other hand, place of residence, the presenc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t home, egalitarian attitudes, trust in society, caring attitudes toward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attribution of poverty to societal factor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in the hiring process of private company employees. In addition, the stronger the meritocratic belief, the weaker the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in the hiring process of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company employees. It prov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tocratic belief and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was not moderated by such factors as age, the presenc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t hom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ur study showed some intriguing results that were contrary to *a priori* expectations, and is thus expected to trigger other follow-up studies.

Keywords: affirmative action, meritocracy, recruitment, logistic regression

◆ 2022. 7. 26. 접수 / 2022. 8. 29. 1차수정 / 2022. 9. 20. 게재확정

*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k_goeun@korea.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kimkk@korea.ac.kr)